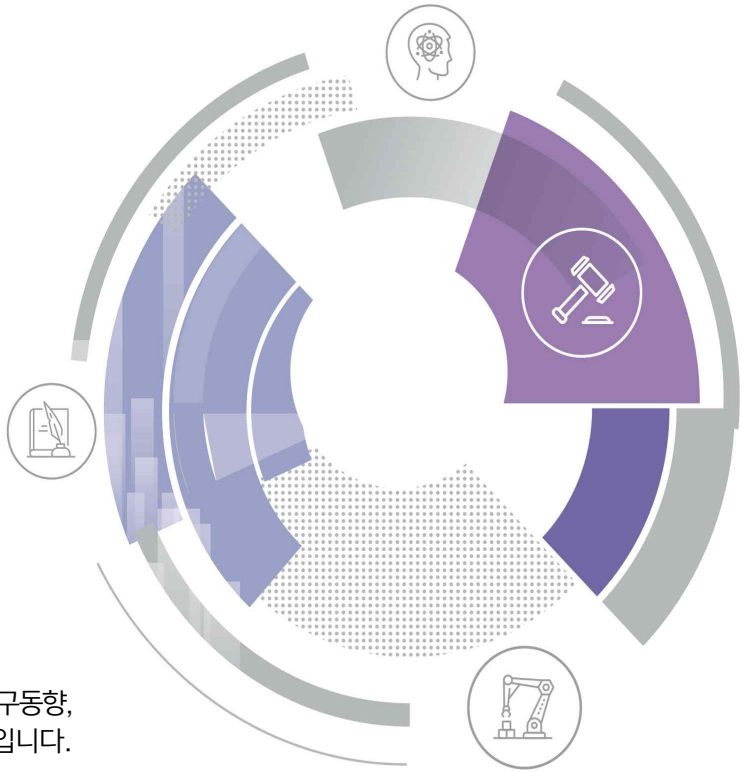
2025년 10월

재정·정책 정보



❑ 본 자료는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에서 최근 국내·외 경제 동향, 국가 및 지방재정 연구동향, 주요 정책 등을 파악하여 요약 정리한 자료입니다.

❑ 의정활동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목 차

Ⅰ. 국내외 경제동향

1. **[국내]** 10월 경제동향 ····· 1

2. **[국외]** 2025년 9월 글로벌 주요국 경제동향과 전망 ····· 3

Ⅱ. 국내 재정

1. 지역 주도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과제와 방향 ····· 5

2.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지방재정 장기 전망과 진단 ····· 7

Ⅲ. 국내외 주요정책

1. **[정책복지]** 지역간 관계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방소멸대응전략 ····· 9

2. **[행정문화]** 해외 주요국의 지속가능한 관광 전략 ····· 11

3. **[산업경제]** 산업 부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과제 ····· 13

4. **[건설환경소방]** 지역 · 현장 중심 재난관리체계 재정립 방향 ····· 15

5. **[교육]** 인구감소지역에서 학교의 역할 ····· 17

부록 <재정·정책 정보> 발행 연도별(2024~2025년) 목록

Ⅰ. 국내외 경제동향

01 [국내] 10월 경제동향

원문 바로가기

KDI 한국개발연구원 (′25. 10.)

❑ 요약

❍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위축으로 낮은 생산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 부진은 완화되는 모습

❑ 소비

❍ 정부 지원 정책 등에 의한 소비 증가가 일부 조정되고 있으나, 소비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흐름은 유지

- 전월에 급증했던 소매판매액이 일부 조정되었으나, 소비 개선세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9월 소비자심리지수(110.1)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시장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는 등 소비 여건도 개선

❑ 설비투자

❍ 반도체 투자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여타 부문의 부진으로 미약한 흐름을 이어감

- 8월 설비투자(-5.7% → -0.4%)는 변동성이 높은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나, 기계류는 완만한 증가에 그침
- 한편, AI 수요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반도체 투자의 호조세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

❑ 건설투자

❍ 건설기성이 전반적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건설투자는 부진한 흐름을 지속

- 8월 건설기성(-14.0% → -17.9%)은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계절조정 전월 대비로도 6.1% 감소
- 건축수주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건축착공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면서 건설투자 부진 장기화의 요인으로 작용

❑ 수출

❍ 수출 증가세가 완만하게 둔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높은 수준의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도 지속

- 9월 수출(1.2% → 12.7%)은 조업일수 확대(-1일 → +4일)에 주로 기인하여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일평균 기준으로는 전월(5.7%)보다 낮은 -6.1%의 감소를 기록
- 수입(8.2%)이 반도체 장비(14.4%)를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95.6억달러)는 흑자 기조를 이어감
- 한편,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의 대중 관세 추가인상 예고로 인해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모습

❑ 노동시장

❍ 건설업과 제조업의 부진이 지속되며 취업자 수 증가폭이 축소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고용 여건은 둔화 흐름을 이어감

- 8월 취업자 수는 16.6만명을 기록하며 전월(17.1만명)에 이어 증가폭이 축소
- 계절조정 고용률(62.8%)과 경제활동참가율(64.4%)이 전월 수준에 머무른 가운데, 실업률(2.5% → 2.6%)은 소폭 높은 수준을 나타냄

❑ 물가

❍ 물가안정목표(2%) 내외에서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

- 전월 일부 통신사의 일시적 요금 감면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8월:1.7%→9월:2.1%)이 등락하였으나, 7월(2.1%)과 비교하면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
- 근원물가 상승률도 2%를 유지하여 기조적인 물가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금융시장

❍ 통상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신용시장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

- 9월 원/달러 환율이 對미국 투자협정 관련 불확실성으로 전월 말 대비 0.9% 상승하였으며,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도 전환으로 국고채금리(3년)도 2.58%로 상승
- 종합주가지수는 반도체 업황 개선 등에 힘입어 큰 폭(7.5%)의 상승 흐름을 유지

❑ 부동산시장

❍ 대출 규제 강화로 매매가격의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고 거래량도 축소

-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이 점차 반영되며 수도권 매매가격(0.33% → 0.17%) 상승폭이 서울을 중심으로 축소되었으며, 거래량도 둔화 흐름을 나타냄
- 비수도권은 주택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며 매매가격(-0.08% → -0.05%)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거래도 위축

❑ 국제유가

❍ 9월 유가는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면서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0월 들어 OPEC+의 증산 전망과 수요 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락하는 모습

❑ 세계경제

❍ 성장세 둔화 우려가 일부 완화되었으나,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과 재정불안 등 하방 위험이 다수 상존

- 산업생산 증가세 둔화가 완만한 속도로 진행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업황도 회복 국면을 유지하면서 세계경제의 급격한 둔화 우려는 완화된 것으로 판단
- 세계경제는 성장세 둔화 우려가 완화되었으나, 미국의 고율 관세와 정책 불확실성 등이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완화와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 강화 등으로 9월 국제금융시장의 투자심리는 대체로 안정된 흐름세

02 [국외] 2025년 9월 글로벌 주요국 경제동향과 전망

원문 바로가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5. 10.)

❑ 글로벌 경제

❍ **[전망]** 美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은 유지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위협이 증가

-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의 재정적자 심화와 국가부채 부담이 급증
- 8월 말 기준 미국의 전체 실효관세율은 약 19.5%로 193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
- 암호자산의 국경 초월적, 익명적 특성으로 인한 맞춤형 규제와 국제 공조 체계 구축 시급

❑ 주요국 경제

❍ **[미국]** 소비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투자·고용 부진과 무역적자 확대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

❍ **[중국]** 주요 경제지표 둔화, 경기 침체 우려 속 정부는 서비스 소비에 집중

❍ **[일본]** 8월에 이어 9월도 美 관세정책 영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경기 기조를 회복세로 판단

❍ **[베트남]** 8월 베트남 경제는 주요 지표 전반에서 성장세

❍ **[독일]** 경제는 구조적 저성장 국면이 굳어지는 양산을 보이는 가운데 주요 경제연구소는 성장률 하향 조정

❍ **[러시아]** GDP 성장률 지속적인 둔화, 기준금리 인하 및 연착륙 기조 유지, 부가가치세 인상 검토 중

❍ **[UAE]** 견조한 생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한 달 만에 사상 최고치 소비자물가지수(CPI) 경신

❑ 국내 경제

❍ **[전망]** 현대경제연, ’25년 성장률은 하반기에 1.7%를 기록하며 연간 1.0% 성장할 전망

- 정부의 재정정책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회복과 경기의 상승 전환이 예상되며, 기업은 통상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모습

❍ **[수출]** 9월 수출은 659.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7% 증가하며 4개월 연속 월별 최대 수출실적 갱신, 수입은 8.2% 증가, 무역수지는 95.6억 달러 흑자 기록

❍ **[내수]** 8월 소매판매와 투자는 모두 감소했으며 전산업 생산은 보합세를 기록

-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수출 산업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이 내수 회복을 위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물가]**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5%,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

❑ 국내 경제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 ’25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0%, ’26년 성장률은 1.9%로 전망

- 정부의 재정정책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회복과 경기의 상승 전환이 예상되며, 기업은 통상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모습
- 민간소비는 ’25년 1.3%에서 ’26년 1.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소비의 회복세가 투자 영역으로 충분히 확산하지 않으면 경기 회복이 전망치를 밑돌 가능성이 높음

❍ IMF 연례협의, ’25년 한국 경제는 0.9% 성장 후 ’26년에는 1.8%로 반등할 전망

- 완화적 정책은 단기적인 성장을 견인하겠으나, 장기적으로 수출구조 다변화, 가계부채 축소,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서비스 수출 발전 지원, 인구구조 변화 문제 대응 등의 노력이 필요

❑ 주요 경제지표

❍ **[2025년 성장률 전망]** OECD, ’25년 세계 경제성장률 3.2% 전망, 직전 전망치 대비 0.3%p 상향 조정

❍ **[금리]** 9월 美 FOMC, 기준금리 0.25%p 인하, 유로존, 일본, 영국은 금리 동결

❍ **[환율]** 美 금리 인하에도 연준의 매파적 행태와 파운드 가치하락 속 환율 상승세 유지

❍ **[유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석유 인프라 공격으로 인한 유가 상승 압력 확대

❑ 전망 및 시사점

❍ ’25년 국내 성장률(1%)·내수 둔화 국면에서 충북은 수출 의존 업종(반도체·2차전지·바이오 중심)이 지역 성장의 핵심 동력

❍ 원/달러 상승세와 美 금리 인하 병행은 환차익·금융비용 완화의 혼재 효과 → 수출기업엔 우호적이나 환변동 리스크 관리 필요

❍ 미국·EU 관세 불확실성 확대 속 대미·대EU 품목은 세이프가드·규정준수 비용 상승 가능 → 통상 리스크 점검센터(도-상공회의소 공동) 가동 권고

❍ 중국 둔화·독일 저성장에 대한 수요 약세 보완으로, 성장세인 베트남·UAE 등으로 시장 다변화(부품·소재·의료바이오·K-서비스 수출) 강화

❍ 오송 바이오 허브를 국제협력·해외임상 연계 R&D 컨소시엄 플랫폼으로 고도화

❍ 오송 뷰티엑스포와 연계해 UAE·동남아 바이어 초청주간 등 수출상담회 집중 운영

❍ 바이오 행사와 지역 축제를 묶은 체류형 관광상품(교통·패스·숙박 연동)으로 내수 보강

Ⅱ. 국내 재정

01 지역 주도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 제도의 과제와 방향

원문 바로가기

한국지방세연구원 (´25. 9.)

❑ 들어가며

❍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관련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큰 지방교부세 그리고 지역발전정책에 있어 상징적 재원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심 과제를 검토

- **(지방교부세)** 지방세 수입이 충분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개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의 자율성에 기반한 재원활용을 목적

❍ 지방자치 30년 동안 지방재정은 총량증가라는 긍정적 성과 이면에 질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정적 권한과 책임은 제한적

❑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의 쟁점

(2025.8.)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발표	53.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교부세율 상향
(2025.7.) 행안부 장관 청문회	현행 내국세의 19.24%로 규정된 **지방교부세를 단계적으로 상향**(2~3p)할 필요	
행정안전부	• 국정기획위원회에 상향안(19.24% → 22%) 보고, 지역 간 삶의 질, 인프라, 일자리, 의료 격차 해소 •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국가사업의 중앙정부 부담률이 점점 낮아지는 점 등을 고려해 지방 재정을 늘릴 필요	
기획재정부	• 약 9조 원의 국세를 지자체로 내릴 경우 국채 추가 발행 필요, 지방재정 효율성 우선 검토 입장	
(2025.5.) 대선공약 발표	3. 국가균형발전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확대**	

❍ 지방교부세 재원보장 기능 약화에 따른 영향

❍ 자주재원의 감소에 따른 자체사업 비중 축소

❍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을 통한 지역 주도적 지역정책 모색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관련 쟁점

❍ 지역자율계정 세입구조의 안정성 부족

❍ 포괄보조금화에 대한 재검토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실질적 자율성 · 포괄성 확보를 위한 과제

❑ 지방교부세 개선방향

❍ 지난 20여년간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고정되어 있었는데 최근 기준재정수입 증가율이 기준재정수요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보통교부세 조정률이 저하

❍ 이로 인한 보통교부세의 재원보장기능 약화는 모든 지자체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재정부족액 비중이 높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더 큰 타격을 미치고 있는 실정

❍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직성 경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정운영이 어려워졌고 결과적으로 자체사업 비중이 급감

❍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지원, 지역의 일을 스스로 해결한다는 지방자치의 가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의 실현이 요구

❍ 거시경제 여건이나 중앙정부 재정여건 역시 어렵지만 지역의 여건을 고려했을때 법정률 인상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만큼 단계적 인상 방안도 고려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방향

❍ 지역자율계정은 정책기조가 달라질 경우 그 규모가 감소할 우려가 크므로 전체 주세를 지역자율계정 예산으로 편성하여 재원의 안정적 확보

❍ 포괄보조금의 취지를 살려 세분화된 사업을 포괄하여 범주화하는 작업 필요

❍ 보조금 활용 용도를 포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적기에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시사점

☑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논의에 적극 참여해 재정부족액 비중이 큰 시·군(영동·단양 등)에 우선 반영되도록 광역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

☑ 교부세의 재원보장 기능 약화로 자체사업 비중이 줄어든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 본청 주도의 선택·집중 포트폴리오(생활SOC·지역전략산업·인구대응) 재설계

☑ 국고보조 매칭비 부담이 큰 사업은 전면 재점검하고, 매칭비 상향·의무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는 단계적 이행계획과 중단기 재정프레임(3~5년) 수립

☑ 포괄보조금화 재검토에 맞춰 세분 사업을 '광역-유형별 바스켓(예: 산업전환·정주여건·교통안전)'으로 묶고, 시·군 수요에 따라 신속 전용할 수 있는 내부 가이드라인 마련

02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지방재정 장기 전망과 진단

원문 바로가기

국회미래연구원 (‘25. 10.)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저출산·고령화는 우리나라 재정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

❍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가 지방재정 운영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고, 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제언

❑ 지방재정 현황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

❍ 지방재정은 지방자치제도의 물적인 토대이며 정부 재정사용액의 절반을 차지

- 2024년 재정사용액 비중은 중앙정부 51.8%, 지방자치단체 36.6%, 시·도 교육청 11.6%

❍ 일반재정의 경우 양적으로 크게 확장되었으나 재정자립 지표는 악화

-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로 확인한 지방재정 여건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강조된 2000년대 이후로 오히려 악화

❍ 지방교육재정은 지방자치제도의 이원적 구조를 반영하여 일반재정과 분리

- 시·도 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에서도 교육 수요와 예산 배분 간 불균형 확인

❑ 지방재정 전망 방법론과 기초변수 추이

❍ 국가재정과 달리 지방재정 전망에서는 인구구조와 경제력의 지역별 차이에 초점

❍ 지역 인구 전망은 통계청의 2025-2052년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중위 가정을 사용

❍ KDI(‘25.5)는 한국 경제 연평균 잠재성장률을 2025-2030년 1.5%, 2031-2040년 0.7%, 2041-2050년 0.1%로 전망(기간 전체 연평균은 0.6%)

❍ 본 연구는 총조세가 지자체별로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중심으로 세입 전망 방법론 설계

❍ 일반재정 세출은 인구 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사업과 나머지로 구분하여 전망

❑ 지방재정 장기전망 결과 분석

❍ 일반재정 세입·세출은 수도권·중부권과 동남권·서남권 시·도 간 불균형 심화

- 현재의 지방재정 세입 구조로는 증가하는 세출 수요를 유지하기 어려움

❍ 지방교육재정 전망 결과

- 학령인구 감소 폭이 큰 동남권 및 서남권 권역 교육청의 경우 2052년이 되면 학령인구 1인당 교육재정 예산이 기준선(2020-2024년 평균)의 2배가 넘을 전망
- 동남권과 서남권의 경우 1인당 일반재정 부족액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동시에 학령인구 1인당 교육재정 증가 폭도 전국 평균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

❍ 일반재정과 교육재정 통합시의 “통합재정” 효과

- 전망 결과는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의 칸막이를 없앤 후 지역 단위에서 재원을 기능적으로 재배분하는 방식을 통해 지방재정 운용을 효율화할 여지가 있음을 의미

❑ 분석의 한계와 정책 제언

❍ 장기 전망은 현실 경제에서 발생하는 외생적 충격과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움

- 장기적 미래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적 충격, 기술혁명 및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성장경로 이탈, 새로운 정치·사회적 합의의 출현 등이 발생할 가능성 상존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기대의 상승,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확산 등은 장기 전망의 경로를 이탈시키는 요인
- 장기 재정전망 모형은 다양한 외생적 요인들은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전망의 결과는 현재의 경로와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만 의미가 있음에 유의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방재정 개편 방안

- 지자체와 교육청 간 예산 협력 활성화, 내수 연동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고등교육 및 평생·직업교육 분야로 지방교육세수 일부를 재배분
- 중앙정부의 의무복지사무는 중앙에서 전담하고, 교육사무 가운데 산업·지역정책과 연계되는 부분은 지자체가 통합적으로 수행
- 지방자치 분야에서는 행정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는 방안 검토
- 보다 통합적 지역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현행 행정구역을 탈피해서 경제적 실질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체제 개편 검토(예: 권역 단위 통합이나 초광역 연계체제 등)

❑ 시사점

☑ **[학교자원 재배치]** 학령인구 급감 지역(단양·영동) 소규모 학교를 ‘평생·직업교육+돌봄’ 복합공간으로 단계 전환, 교육재정의 고정비를 지역서비스로 전환

☑ **[예산 칸막이 완화]** 특별회계(교육)-일반회계 간 공동기금(가칭)으로 시설·유휴교실을 지역 돌봄·방과후·노인평생학습에 활용

☑ **[교부금 제도 개선 건의]** 내수 연동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도입을 정식 건의하고, 충북 시뮬레이션 결과(소비·고용 변동)로 근거 제시

☑ **[교육세수 용도조정]** 일부를 고등·평생·직업교육으로 재배분해 오송 바이오·오창 반도체 맞춤 인력양성(학과 전환, 단기직업훈련)과 연계

☑ **[인구영향 예산제도]** 모든 사업을 ‘인구직접영향/간접’으로 구분해 고령친화 주거·보건·교통(농촌 공공모빌리티) 등 인구민감 지출을 우선 배정

☑ **[의무복지 정리 촉구]** 중앙 의무복지 사무의 국고 전담을 요구하고, 도는 지역 연계 교육·산업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통합 수행]

☑ **[행정-교육 협치 강화]** 도-교육청 정례 재정협의체로 학령인구 감소 지역의 학교 통폐합·대체서비스 계획을 공동 의사결정

Ⅲ. 국내외 주요정책

01 지역간 관계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방소멸 대응전략

정 책 복 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5. 9.) 원문 바로가기

❑ 인구감소의 방향성을 고려한 지방소멸 대응 필요

❍ 2010년대 중반 이후 산업과 공간의 대변혁으로 승자 독식 도시주의 현상이 발생되면서 인구이동에 의한 지역간 비대칭성은 더 커지고 있어 인구감소 지역 자체적인 유출 저지, 유입 확대전략만으로는 지방소멸을 방지하는데 한계 내재

❍ 우리나라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내 중심이 되는 인구거점도시와 지역의 인구흡수라는 중층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이동의 방향성이 존재해 보다 큰 틀에서 지역간 관계성 속에서 지방소멸대응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

❑ 인구감소의 중층적 · 위계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전략 미흡

❍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도시외곽 중심의 신도시 개발과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자치구간 인구의 제로섬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정책은 부재

❍ 중소도시의 경우 지역 내 인구댐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중추거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인구붕괴 가속화를 방지하는 한편 생활서비스를 배후지역과 공유할 수 있는 전략 설계 필요

❍ 대도시 배후지역으로서 농어촌 지역은 인근 도시와의 관계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으므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지역 간의 전략적 대응, 타지역과의 관계 접점 확대 등을 적극 고려

❑ 지역간 관계성 기반 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전략 제언

❍ **(제도개선방안)** 광역시의 경우 광역시 전체 차원에서 인구불균형을 시정하고, 개발사업 조정을 위한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중소도시의 경우 인구 확보를 위한 지역활성화 목적의 투자 펀드 제도 개선,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대 및 지방의 인구흐름 전환에 사용

〈 지역간 관계성을 고려한 지방소멸대응전략 추진방향 〉

❑ 시사점

- ☑ **[지방소멸대응기금 용도 전환]** 행사성 지출 축소, 이동·돌봄·의료 접근성 개선에 우선 투입
- ☑ **[충청권 공동대응 체계(대전·세종·충남)]** 학군·의료·환승권 상호인정으로 제로섬 완화
- ☑ 충주·제천 등 중추거점 '인구댐' 지정, 응급·보육·문화 등 생활서비스를 배후 공유
- ☑ 농산어촌-대도시 배후 상호보완 협약으로 통근비 지원·광역패스 도입 (주거-일자리 분담)
- ☑ 도 단위 인구영향평가를 제도화해(개발·이전·신도시) 권역 간 인구불균형을 사전 조정
-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제도 개선과 도-시군-민간 매칭으로 도심복합 재생 촉진
- ☑ 청주-오송-오창 흡인축에 주거·교통·보육을 묶은 정주 패키지 승인·지원
- ☑ 개발사업 인구상쇄제 도입: 과밀 유발 시 타 지역 정주 인프라 의무 투자

02 해외 주요국의 지속가능한 관광 전략

행 정 문 화

한국관광정책연구원 (´25. 9.) 원문 바로가기

❑ 들어가며

❍ 전 세계적으로 관광시장의 회복과 함께 관광수요가 증가하는 흐름 속에서 각국은 급변하는 국제 관광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에 직면

❍ 우리나라 역시 관광정책의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재정립해야 할 중요한 전환점으로, 해외 주요국의 지속가능 관광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가 효과적인 관광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 도출

❑ 해외 주요국 지속가능한 관광 전략

❍ 일본

- 첫째,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 대응과 환경보존을 위해 혼잡지역과 주요 자연자원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
- 둘째, 친환경·사회책임 관광의 확산을 위해 2025년까지 전국 100개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관광 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본 전역 에서 재생에너지 도입, 에너지 절감 설비, 지역자재 활용, 폐기물 절감 등 숙박 인프라의 친환경 경영 적극 장려
- 셋째, 숙박세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 재정 확충
- 넷째, 친환경 교통수단과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내연기관 차량 의존도 낮춤
- 다섯째, 디지털 기반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해 관광객 흐름 관리와 이동 효율화 강화

❍ 스페인

- 첫째, 지역 불균형 해소와 관광의 분산화를 위해 지방정부 및 내륙·농촌 등 비 전통 관광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 둘째, 환경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전환 본격화
- 셋째, 디지털 전환을 통한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강조
- 넷째, 관광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포용적 관광정책 추진
- 다섯째, 협력 기반의 정책 거버넌스 구축과 성과 기반 평가체계 정비 병행

❍ 이탈리아

- 첫째, 지역 불균형 해소와 내륙·농촌 지역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 중점 추진
- 둘째,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호를 위해 관광의 녹색 전환 본격화
- 셋째, 디지털 전환을 통한 관광산업 혁신 및 체류형 관광지 스마트화 적극 추진
- 넷째, 관광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포용적 관광정책 강화
- 다섯째, 협력 기반의 정책 거버넌스와 성과 기반의 평가체계 병행

❑ 종합분석 및 시사점

❍ 해외 주요국은 팬데믹 이후 관광산업 회복을 넘어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 구축을 국가전략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자국의 제도·행정체계와 지역 여건에 기반한 고유의 전략을 수립

❍ 첫째, 지역균형발전과 분상형 관광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편중 및 특정 지역의 오버투어리즘 현상에 대응하고 체류 중심의 지방 관광을 활성화 하기 위해 지역 거점 관광지 발굴 및 콘텐츠 연계 전략 강화

❍ 둘째,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통한 관광의 질적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수도권 편중 현상과 단기 방문 위주의 관광 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 체류 콘텐츠 개발, 지역 숙박 연계 형 체험 프로그램 확대하고 중장기 숙박이 가능한 여건 조성 및 지역 체류에 특화된 여행산업 생태계 육성

❍ 셋째, 디지털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관광데이터 기반의 정책 설계 역량을 제고하고 중앙·지자체·민간이 함께 활용 가능한 관광 정보 공유 인프라 구축

❍ 넷째, 관광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가 차원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녹색 숙박 인증제 운영, 친환경 교통 지원 등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 추진

❍ 다섯째, 관관광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관광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평가와 환류를 위한 성과 관리체계 구축

❑ 맺음말

❍ 우리나라 또한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관광정책의 전환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해외 주요국의 사례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관광정책 설계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향후 체계적인 관광정책 수립을 위해 정책 전반에 지속가능성 확보, 지역 기반 관광 활성화, 디지털 및 녹색 전환 등 분야별 전략을 통합적으로 검토

❍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광정책을 설계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

❑ 시사점

☑ **[혼잡관리·분산]** 단양·청남대 등 혼잡지에 예약제·혼잡신호등·탄력요금 도입, 비혼잡 권역(괴산·영동·보은 등)에는 체류형 상품 집중 지원

☑ **[내륙형 루프코스]** 대청호-충주호-속리산권을 2~3박 “느린 여행” 루프로 설계 (걷기·자전거·로컬 식음·공예 체험 연계)

☑ **[그린스테이 인증]** 재생에너지·고효율 설비·지역자재·폐기물 감축 기준의 ‘충북 그린스테이’ 도입, 인증 숙박에 금리·마케팅 인센티브 제공

☑ **[디지털 전환 바우처]** 소규모 업소 대상 예약·다국어·접근성 표준·수용력 관리 솔루션 도입 지원

03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과제

산 업 경 제

국회예산정책처 (´25. 9) 원문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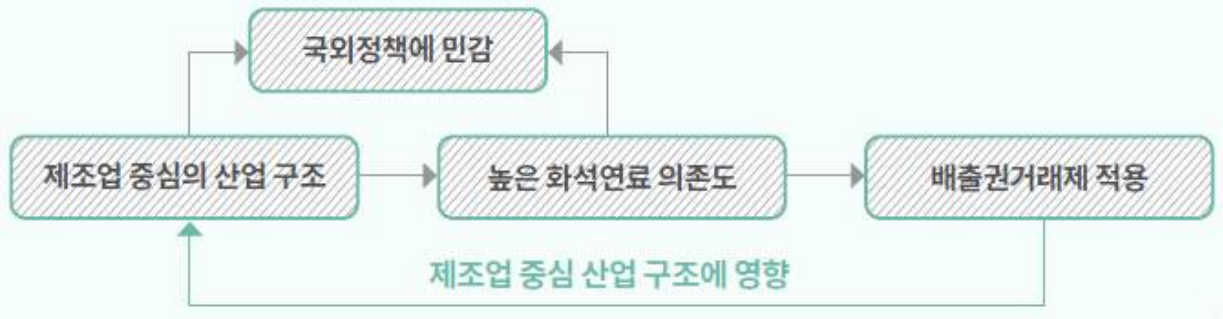
❑ 산업부문의 탄소배출 현황

❍ 2024년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국가 총배출량의 41.3%1)에 달하며, 2030년에는 그 비중이 절반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

- 특히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정유 등 5대 탄소 배출 업종이 산업 온실가스 배출의 약 70%를 차지

❑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특성과 구조적 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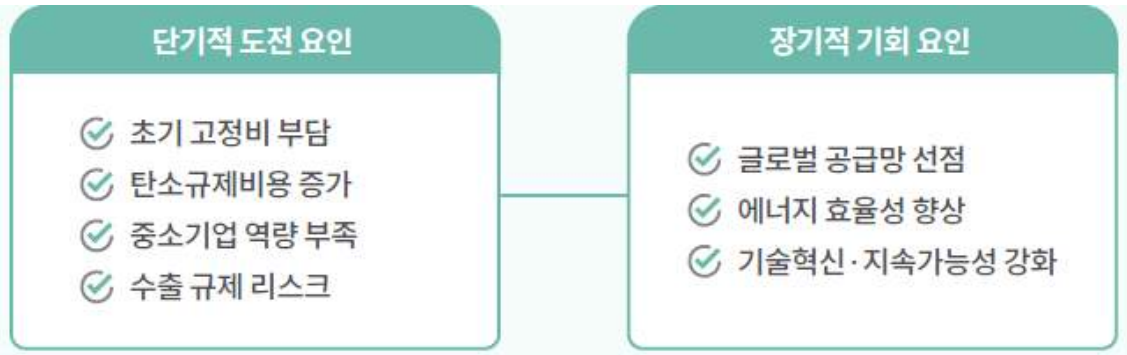
❍ 우리 산업은 제조업 중심 구조이며,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전환기



❑ 탄소중립 전환이 산업에 미치는 도전과 기회

❍ **(도전)** 산업 부문은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막대한 초기 투자와 규제 비용 부담, 글로벌 경쟁 환경 변화, 그리고 기업 간 역량 격차 심화라는 구조적 도전에 직면

❍ **(기회)** 비록 단기적으로 산업에 부담이 따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혁신·경쟁력 강화·시장 확대 등의 기회를 제공



❑ 산업의 탄소중립 이행전략

❍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4대 전략영역은 아래와 같음

전략 영역		핵심 과제
기술	① 저탄소 공정 전환·혁신 기술 개발	• 저탄소 공정 전환 • CCUS 기술 개발 • 친환경 연료 대체
	② 에너지 전환·효율화	• 저탄소 기반 에너지로의 전환 • 에너지 효율성 향상
산업 구조 전환	③ 순환경제·공급망 혁신	• 자원순환형 생산 체계 구축 • 탄소중립 공급망 전환
정책·제도	④ 정책 수단·지원 체계 확대	• 시장 기능을 활용한 가격 신호 강화 • 기술혁신 인센티브 • 금융 접근성 제고 • 중소기업 전환 역량 강화 • 국제 규범 대응

❑ 정책 및 입법과제

❍ 4대 전략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 향후 재정 지원, 법·제도 정비, 규제 대응 등을 통해 산업·에너지 전환의 정책 기반 마련

❑ 시사점

☑ **[도내 주력업종 맞춤 전환로드맵]** 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1군(공정전환 필요), 2군(에너지전환·효율화 중심)으로 구분해 단계별 감축목표·투자계획 수립

☑ **[순환경제·공급망 연계]** 산업단지 내 부산물(소성열, 슬러지, 연소재) 산업공생 플랫폼 구축, 재활용 원료 지역조달 확대로 공급망 배출 감축

☑ **[중소기업 전환 역량 지원]** 공정진단·MRV(측정·보고·검증) 무상 컨설팅, 전환펀드(저리·보증), 장비 공유·공동구매로 대기업-중소 협력 모델 정착

☑ **[데이터·디지털 기반 관리]** 사업장별 배출·에너지 데이터 표준화, 도 통합 대시보드로 KPI 모니터링(에너지집약도, 공정별 배출, 재생전력 비중)

☑ **[녹색조달·시장 신호 강화]** 도 공공공사에 저탄소 시멘트·저탄소 소재 의무 비율 도입, RE100 참여 기업 우선가점으로 수요 견인

☑ **[인력전환·안전망]** 공정전환 기술인력(전기화·수소·CCUS·데이터) 재교육, 전환 과정의 고용 안정 프로그램 병행

04 지역 · 현장 중심 재난관리체계 재정립 방향

건설환경소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5. 9.) 원문 바로가기

❑ 지역 · 현장 중심 재난관리체계 재정립 필요성

- 2015년 센다이 재난위험경감 프레임워크와 2018년 UNDRR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제 재난관리의 핵심 원칙은 “지역 현장 중심(All disasters are local)”으로 전환
- 국내 재난관리체계는 의사결정 권한이 중앙 집중으로 현장 대응에 시차가 발생하며, 중앙부처가 지휘·통제와 자원조정을 행사하는 반면, 실책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는 ‘권한-책임 불일치’ 구조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중앙 집중적 재난관리로 인한 지역별 특성 반영 미흡, 집단 조직·인력 부족, 기초 행정단위 대응 인프라 부재,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지휘체계 부재 등과 같은 구조적 한계가 노출
- 기후위기 등으로 재난 복합화·대형화·초고밀화 사회 진입에 따른 재난복구계층 확대 등으로 기존 표준화된 재난관리 방식의 한계 발생
- AI·빅데이터 기반 재난 예측기술 발전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중앙-지방 협력 기반 조성 등으로 재난관리 혁신 여건 마련

❑ 지역 · 현장 중심 재난관리체계 재정립 방향

- 지역 현장 중심 원칙을 적극 도입하여 중앙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 주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권한 재정립과 지역 맞춤형 체계 구축)** 중앙-지방 간 재난관리 권한 및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재난관리체계와 차별화된 재난대응 매뉴얼 구축
- **(의사협의 기반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읍·면·동 단위 재난대응 인프라로 확충하고 주민참여형 재난관리 모델을 확산시켜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전달 조직 확대와 지원 체계 구축
- **(통합적 협력 대응 체계 구축)**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 간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자원 공유 및 협력 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과 광역단위 공동 대응 체계 마련
- **(과학적·디지털 기반 재난관리 혁신)** 중앙-지방 및 관계기관 간 재난 데이터 실시간 공유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고, AI·빅데이터 기반 재난 예측 시스템 개발과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재난관리 역량 강화

❑ 지역 · 현장 중심 재난관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

❍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 분권화 및 권한 배분 강화

- 기초자치단체에 재난사태 선포권, 강제대피명령권 등 현장 즉응권한을 부여하는 등 의사결정 시차를 최소화
- 중앙정부는 국가적 재난 조정과 광역자원 동원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현장 대응 주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역할 재정립

❍ 지역 중심의 재난대응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재난대응 역량 강화

- 마을 단위 자율방재단을 체계화하고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취약계층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자율대응 역량 확보
- 방재안전직렬 처우 개선을 통해 전문성 축적 기반 마련

❍ 지역별 재난 특성과 취약요인 대응을 위한 맞춤형 재난관리체계 구축

- 도시형 · 농촌형 · 산간형 등 지역 유형별로 차별화된 재난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대응 체계 확립
- 취약계층 밀집지역과 노후 기반시설 집중지역을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집중 지원 체계 운영

❍ 재난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재난관리 조직 및 예산 역량 확충

- 지역 재난위험도를 기반으로 차등적 예산을 배분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 확충 방안 마련

❍ 효율적 협업 대응을 위한 복합재난 대응 통합체계 확립

- 통합상황실 운영으로 모든 대응기관이 동일한 상황인식을 공유하는 의사결정 체계 확립

❍ 광역 단위 재난의 대응력 제고와 자원의 효율적 확보 · 관리를 위한 초광역 재난관리 협력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응원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자원 공동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협력 기반 강화

❑ 시사점

☑ **[권한·책무 재설계]** 중앙은 조정·광역자원, 도·시군은 현장 총괄로 역할 명확화

☑ **[통합 지휘체계]** 경찰·소방·지자체 일원화 지휘 + 통합상황실(도 단위) 운영 규칙(COP) 확립

☑ **[지역맞춤 대응]** 도시·농촌·산간 유형별 매뉴얼과 복합재난 시나리오 훈련 상시화

☑ **[최소 행정단위 강화]** 읍·면·동 EOC(소형 상황실) 표준모델 보급 + 통신백업 체계

☑ **[데이터·AI 기반 의사결정]** 센서·CCTV·기상·의료·대피소 도 데이터허브 구축, AI 예측·경보 실전 적용

☑ **[주민참여·돌봄 연계]** 자율방재단 + 주민자치회 + 보건·복지 연동으로 취약계층 보호 체계화

☑ **[초광역 상호응원]** 충청권 장비·인력 공동 풀과 법·제도 기반 마련으로 광역재난 대응력 증대

05 인구감소지역에서 학교의 역할

교 육

한국교육개발원(´25.10.) 원문 바로가기

❑ 요약

❍ 인구감소지역의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 '학교' 역할을 통해 지역 공동체유지에 기여해야 함

❍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학교 체제의 유연화와 학교 재배치 및 재구조화, 교육과정의 유연화와 자율성 확대, 인구감소지역의 교원 확보 및 배치기준 개선, 충분한 재정확보, 지역단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필요

❑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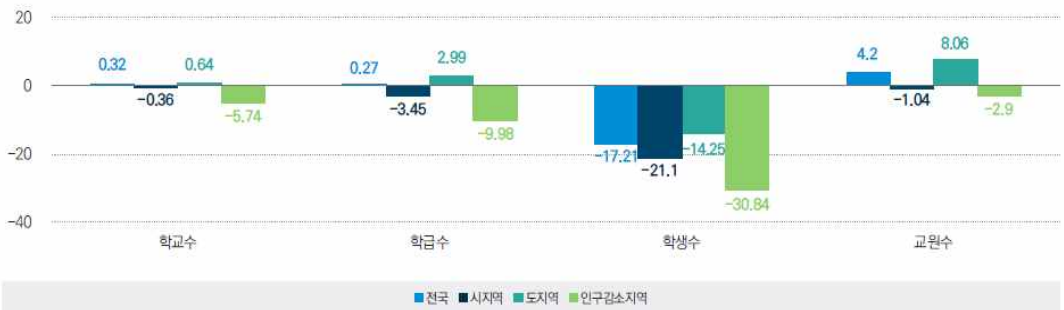
❍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본연적 기능과 함께 지역 공동체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의 대응 방향 모색 필요

❑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과 학교

❍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교육 투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낮은 수준이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교육, 돌봄·보육, 주거에 대한 투자를 통해 출산률 및 지역 교육의 질 제고

- 지난 10년 동안 인구감소지역의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 변화를 다른 지역과 비교한 결과, 학교 수는 전국적으로 0.3% 증가하였으나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오히려 5.7% 감소하였으며, 학생 수는 전국적으로 17.2% 감소한 반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30.8% 감소

[그림 1] 최근 10년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 증감률('14~'23)



-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에서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2022년과 2023년 교육분야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교육 투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판단
- 작은학교 성공사례로 소개되는 학교들의 경우 전입하려는 주민들에게 거주지를 지원하면서 학생들이 증가

❑ 성공사례: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 아산시 송악면의 거산초등학교는 2001년 분교장으로 격하되어 폐교 위기에 놓였으나, 학교와 지역 마을교육공동체의 활동을 통해 학생 수가 증가하여 본교로 승격

- 지역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이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학교'를 기치로 학교 교사와 마을교사가 협력하여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의 배움을 넓히는 교육과정 운영
- 5월의 수채화교실, 6월 서예교실, 11월 랄랄라교실, 10월~12월의 연극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과정과 마을교육과정을 연계하여 학교 교사와 마을 교사의 협력을 통해 지역 속에서 배움 확대

❍ 일본 고치현 고치시 토사야마에 위치한 토사야마학사(土佐山学舎)는 '의무교육학교(초·중 통합운영학교)'로 2011년 '토사야마 100년구상'을 발표.
이후 지역의 자연환경, 마을, 산업(유자농업)을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교가 지역 살리기의 핵심임을 확인

- '학교가 지역활성화의 핵심'이라는 기치 아래 지역의 미래는 곧 지역에서 자라는 학생들이라는 점에 대해 지역민, 학부모, 교직원이 공감하였으며, 이와 같은 공동의 목적의식 아래 학교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지역과 학교의 연계를 강화

❑ 인구감소 지역에서의 교육을 통한 지역 소멸 대응 방향

❍ 인구이동과 관련하여 지역에서의 학교는 '교육으로 인한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보다는 '교육 때문에 이동'하는 경우를 막는 노력이 필요하며, 학교는 근원적 교육기관 역할 수행,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 되어야 하고, 지역사회의 '학교' 역할을 수행해야 함

❍ 학교와 지역사회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 재설정하고, 학교 체제의 유연화와 학교 재배치 및 재구조화, 교육과정의 유연화와 자율성 확대, 인구감소지역 교원 확보 및 배치기준 개선, 충분한 재정 확보, 지역단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

❑ 시사점

☑ **[학교=지역 공공 인프라로 재정의]** 교육·주거·돌봄·교통·일자리 패키지화

☑ **[거점-협력(클러스터) 운영]** 교원 순환, 공동 교육과정, 스쿨버스/온디맨드 택시 연계

☑ **[교육과정]** 학교장 시수·평가·시간표 자율권 확대, 마을교사·기업전문가 공동교수제 제도화

☑ **[교원 확보]** 순환근무+정주 유인(가산점·공공임대·연구년), 순회전담 교사풀(예체능·과학·SW) 운영, 마을교사 인증제로 수업 다양성·공백 보완

☑ **[거버넌스·데이터]** 학교운영협의회+마을거버넌스 결합, 대학·기업과 PBL 과제 공동 설계

<재정·정책 정보> 발행 연도별 목록

■ 국내외 경제동향

구분		제 목	기관
2024	1월	1월 경제동향	KDI 한국개발연구원
		동남아 반도체 허브로 도약하는 베트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월	2월 경제동향	KDI 한국개발연구원
		K-Food 수출 동향	KDB 미래전략연구소
	3월	3월 경제동향	KDI 한국개발연구원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운영과 우리나라 고향 사랑기부제에 대한 시사점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월	4월 경제동향	KDI 한국개발연구원
		인간과 기계의 협력으로 미 제조업 생산성 향상을 꿈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월	5월 경제동향	KDI 한국개발연구원
		영국 창조산업 최신 동향 및 전망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월	6월 경제동향	KDI 한국개발연구원
		중국의 식량안보보장법 제정 동향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월	7월 경제동향	KDI 한국개발연구원
		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기를 계기로 우리나라 시장상황 점검	국회입법조사처
	8월	8월 경제동향	KDI 한국개발연구원
		글로벌 폭염 확산의 거시경제 파급효과	국제금융센터
	9월	9월 경제동향	KDI 한국개발연구원
		최근 수출 호조의 구조적 요인과 배경	KIET 산업연구원
	10월	10월 경제동향	KDI 한국개발연구원
		중국 저가 수출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역협회
	11월	11월 경제동향	KDI 한국개발연구원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발표	국회예산정책처
	12월	12월 경제동향	KDI 한국개발연구원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산업정책 : 대미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2025	1월	1월 경제동향	KDI 한국개발연구원
		2025년 거시경제 전망	KIET 산업연구원
	2월	2월 경제동향	KDI 한국개발연구원
		EU의 2025년 전기차 시장 전망과 지원제도	국회도서관
	3월	3월 경제동향	KDI 한국개발연구원
		일본의 경제·산업안보 강화 동향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4월	4월 경제동향	KDI 한국개발연구원
		디지털 경제 커진 미국, 해외 디지털세에 관세로 보복 가능성 시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월	5월 경제동향	KDI 한국개발연구원
		美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어떻게 볼 것인가?	국회입법조사처

	6월	6월 경제동향	KDI 한국개발연구원
		2025년 5월 글로벌 주요국 경제동향과 전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월	7월 경제동향	KDI 한국개발연구원
		2025년 6월 글로벌 주요국 경제동향과 전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월	8월 경제동향	KDI 한국개발연구원
		2025년 7월 주요국 경제동향과 전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월	9월 경제동향	KDI 한국개발연구원
		2025년 8월 글로벌 주요국 경제동향과 전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월	10월 경제동향	KDI 한국개발연구원
		2025년 9월 글로벌 주요국 경제 동향과 전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국내 재정

구분		제 목	기관
2024	1월	구직급여 관련 입법 및 해외 동향 분석과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입법 동향 및 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
	2월	이민정책을 통한 경제활동인구 확충 방안	국회예산정책처
		독일 지방정부의 인구감소 대응 재정정책	한국지방재정공제회
	3월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한국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로 출자 : 관련 쟁점과 과제	국회예산정책처
	4월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재원확보 논의 흐름과 지향점	한국지방세연구원
		열린 특구 정책과 그 경쟁자들	서울연구원
	5월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발표	국회예산정책처
		교육재정과 미래인재양성의 과제	국회예산정책처
	6월	OECD 회원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방식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국회미래연구원
		저출생 대응 고용환경 조성 방안	경기도일자리연구센터
	7월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지원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한국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피용자보수 관계	국회예산정책처
	8월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관련 주요 쟁점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산업연구원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에 따른 주택시장과 지방세입 영향	한국지방세연구원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제도의 효과적 운영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10월	다자녀 가구 주택 취득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조례 신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한국지방세연구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부담 전망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11월	송전망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	국회입법조사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시행	국회예산정책처
	12월	군부대 구조개편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회예산정책처
		지방자치단체의 외부경비절감 노력과 시사점	한국지방세연구원
2025	1월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 현장 검토 및 관리 방안 제안	한국지방세연구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현황과 고려사항	국회예산정책처
	2월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력수급 체계화 방안 연구	산업연구원

		지방세 조례감면 활성화를 위한 제도설계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3월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
		빈집 정비를 위한 지방세 현황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정책처
	4월	역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례와 국회 심의 결과	국회예산정책처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 현황 및 개정동향	국회예산정책처
	5월	지방소비세 배분체계 개편 필요성과 방향	한국지방세연구원
		무역환경 불확실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대응방향	한국지방세연구원
	6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증가요인 및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지방제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전략	한국지방세연구원
	7월	재정 관련 헌법 개정 논의 현황과 주요 쟁점	국회예산정책처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논의, 어떻게 풀어야 하나?	한국교육개발원
	8월	고향사랑기부제, ‘법인의 기부허용’에 대한 쟁점과 방향	한국지방세연구원
		인구축소사회에 적합한 초중고 교육 행정 및 재정 개편방안	한국개발연구원
	9월	국민주권시대 주민 중심의 단계별 지방재정 전략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10월	지역주도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과제와 방향	한국지방세연구원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지방재정 장기 전망과 진단	국회미래연구원

■ 국내외 주요정책

○ 정책복지

기 간		제 목	기 관
2024	1월	20~30대 여성의 고용 출산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월	가난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	국회입법조사처
	3월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도입된 생활인구 제도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4월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월	여성 5대 폭력피해자 통합지원사업 운영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6월	사회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위험 고독 그리고 외로움	국회도서관
	7월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국토연구원
	8월	초고령사회 노인 대상 식사 지원 현황 및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9월	청년의 지역 거주의향과 삶의 만족도	국회미래연구원
	10월	출생아 수 반등 가능성 점검	국회예산정책처
	11월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하지 못하는 이유	국회입법조사처
	12월	노숙인 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5	1월	내 집에서 나이들기를 위한 방문진료 활성화	국회입법조사처
	2월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지원서비스 현황과 과제	국회미래연구원
	3월	고령자 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제 설정	국토연구원
	4월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5월	돌봄통합지원법 도입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쟁점 및 개선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월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 예방을 위한 주요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7월	1인가구 '(가칭)지정돌봄관계등록제' 도입 검토	국회미래연구원

	8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대책 제언	국회입법조사처
	9월	언어서비스에서 위기가정 발굴까지 : 결혼이민자 통번역이중언어 교육지원 사업의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10월	지역간 관계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방소멸대응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행정문화

기 간		제 목	기 관
2024	1월	외국인 방한 관광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여가활동 비교	통계개발원
	3월	중국인 방한관광 재개의 효과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4월	2024 지방행정 트렌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월	포털뉴스 시대, 지역신문 활성화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6월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발표	국가전략정보포털
	7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재부상	국회입법조사처
	8월	글로벌소셜데이터속에 나타난 한국 여행 버킷리스트	한국관광공사
	9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0월	인구감소지역 복수주소제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	국회입법조사처
	11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12월	지역 주도의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운영 개선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5	1월	A.I와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원지도의 민생현안 모니터링 방안	국토연구원
	2월	문화체육관광 산업 2024년 동향과 2025년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월	게임 콘텐츠 시장 확장 : 하는 게임에서 보는 게임까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4월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 출범 의의와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5월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	국토연구원
	6월	그린리모델링의 추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7월	지방공무원 기준인건비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8월	인구감소시대 지역간 인구이동 패턴과 대응전략	국회미래연구원
	9월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안전한 AI 기술 도입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0월	해외 주요국의 지속가능한 관광 전략	한국관광정책연구원

❍ 산업경제

기 간		제 목	기 관
2024	1월	도시농업 지원 10년,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월	고령친화산업의 실태와 향후 대응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3월	기존 수소 정책의 점검과 정책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4월	돈 되는 잠, 슬리포노믹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5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등을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6월	최근 과학기술인력의 고용 특성과 시사점	한국경영자총협회

	7월	직장 내 AI의 신뢰성 보장과 근로자 보호	국회입법조사처
	8월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	농림축산식품부
	9월	푸트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10월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한 고찰	산업연구원
	11월	디지털 전환의 지역기업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12월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5	1월	스킬이코노미: 변화하는 기술 시대의 생존 전략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월	첨단 스마트 물류 시대 물류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인재 양성 전략과제 탐색	국회미래연구원
	3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하 지방 산업구조 전환 전략	국토연구원
	4월	웹툰 플랫폼 '피너툰' 사례로 본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 보호 쟁점 및 향후 과제	극회입법조사처
	5월	서비스산업의 디지털 혁신 과정과 정책 방안 -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6월	보편적 번영의 시대: 한국형 AI 산업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산업연구원
	7월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이 한국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8월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재정지출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9월	AI를 활용한 농림업 정책 고도화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월	산업 부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과제	국회예산정책처

○ 건설환경소방

기 간		제 목	기 관
2024	1월	아동이 참여하는 지역개발: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2월	도시 AI(Urban AI) 구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국토연구원
	3월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방안	국토연구원
	4월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으로 재탄생한 K-패스, 더 나은 방향은?	국회입법조사처
	5월	바이오제조 혁신전략 발표	국회예산정책처
	6월	n분 도시 실현의 핵심 수단은 도보와 자전거 이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7월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공간전략 강화방안	국토연구원
	8월	해외 소방 분야 인력 현황 및 시사점	한국행정연구원
	9월	부동산 플랫폼 투자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국토연구원
	10월	지역혁신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전략 수립방향	국토연구원
	11월	유원시설업 중대한 사고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2월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을 위한 국내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 전략	한국환경연구원
2025	1월	바르셀로나 대도시권 개발계획과 마니페스타 15	국토연구원
	2월	미국의 파리협정 재탈퇴 의의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3월	재난 피해 유가족 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4월	고령자의 개인교통수단 통행을 위한 도로환경 개선 방안	국토연구원

	5월	디지털 비상사태 발생 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입법·정책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6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입법 및 정책방안	국회입법조사처
	7월	대형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8월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순환 정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하천사업의 환경평가 방안	한국환경연구원
	10월	지역 · 현장 중심 재난관리체계 재정립 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교육

기 간		제 목	기 관
2024	1월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의 쟁점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월	학생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회복을 위한 놀이 중심 학급 경영	한국교육개발원
	3월	늘봄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4월	디지털 격차와 빈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5월	교육개혁의 추진과 AI 디지털교육 정책의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6월	학교 안 학업중단 현황과 지원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7월	SSP-지역과 학교가 함께 보살피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	한국교육개발원
	8월	디지털 심화 시대, 학습자의 자기조절역량 개발 지원 방향	한국교육개발원
	9월	일본의 학교 통폐합 양상, 기준 및 폐교 이후 활용 사례	한국교육개발원
	10월	학교 구성원 직종 간 업무 갈등 양상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11월	이주민 밀집지역 소재 학교의 실태와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12월	학부모지원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향후 개선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한국교육개발원
2025	1월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성과와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월	일본 이주배경학생의 사회진출 지원사업 기반 만들기와 사례	한국교육개발원
	3월	프랑스 학교의 사회적 혼합 실험이 주는 의미와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4월	핀란드의 직업특수교육: 장애 학생을 위한 포용적이고 유연한 지원 체계	한국교육개발원
	5월	학생의 학교 내 안전 강화를 위한 (가칭) ' 하늘이법 ' 쟁점과 개선 방향	국회입법조사처
	6월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의 현황 및 개선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7월	초고령·장수사회와 디지털 대전환의 교차점, 고령 세대의 평생교육을 어떻게 다시 설계할까?	국회입법조사처
	8월	우리나라 소규모학교 통합 및 육성 · 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9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현장의 변화 및 정책 제언	국회미래연구원
	10월	인구감소지역에서 학교의 역할	한국교육개발원